다산포럼

떠벌리기

김 진 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청백리로 유명한 명나라 관리 양계종(楊繼宗)이 가흥군을 다스릴 때 하루는 퇴근하여 저녁 밥상에 올라온 돼지머리를 먹었다. 다 먹고 나서 어디서 난 것인지를 묻자 부인은 마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했다. 곧장 북을 울려서 관청의 부하직원을 다 불러 모으고는 "나 양계종, 집안을 잘못 다스려서 처가 뇌물을 받았고, 내 몸도 불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조협환(구토제)을 삼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고 그날로 처자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율기(律己)'조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군자의 행실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마부에게 돼지값을 후하게 쳐주고 부인에게는 두 번 다시 물건을 받지 말라고 조용히 다짐받는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부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남모르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정약용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조용히 처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연극적 무대를 만들어 토하는 모습까지 전시하며 자신의 청렴결백을 크게 떠벌렸다는 점에 있었다.

명나라의 주신(周新)이라는 관리는 아랫사람이 바쳤던 거위고기를 집 안에 걸어두고 썩히면서 뭔가를 바치려고 오는 자가 있을 때마다 말없이 그것을 가리켰다고 한다. 정약용은 썩혀버릴지언정 아랫사람들에게서 받은 물건 하나라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의지의 상징으로 이와 같은 일화를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에서 양형을 위해 참조하던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에서는 뇌물을 받으면 일단 파직시키고 그 액수가 80관에 이르면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조선왕조 자체 법률인 '경국대전'에는 관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그 관원을 천거한 사람도 처벌하고, 처벌받은 관원의 아들과 손자도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연좌제의 규정까지 있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던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뇌물로 인한 사건사고는 3500여 회에 육박하고 있으며 뇌물 관리를 용인하는 왕에게 조치를 촉구하는 상소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법과 규정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뇌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법을 적용할 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뇌물 청탁으로 이익공동체를 이룬 집단에서 서로 감싸주고 이끌어주며, 왕도 뇌물 구조를 바로잡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부패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조차도 중신들이 고가의 음식을 뇌물로 받은 일을 집단으로 고백하며 서로 엄호하자 음식은 뇌물로 처리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으며, 36명의 노비를 뇌물로 받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형 기준의 10배에 이르게 된 병조판서 조말생을 유배형으로 처분하여 우리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목민심서'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부정부패의 정도가 최악으로 치달아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절규할 정도였다. 19세기 삼정의 문란은 대개 거대한 뇌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혹한 착취가 야기하는 것이었으며, '애절양'에서처럼 사내아이를 낳은 아비가 스스로 제 물건을 끊어버리는 극단적 참상까지 이어지는 일이었다. 국가를 장악한 집단이 부패공동체가 되어버리면 희귀하게 성취한 대동법이니 균역법이니 하는 개혁 법안들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반부패 총괄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잘 알겠지만 그럴수록 정권 관계자들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든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부조리 연극 대사처럼 외쳐댄다. 반부패 따위는 관심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극적 행위이며 부패를 크게 떠벌리는 것이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앞으로도 많은 정부 기관이 이 연극 무대에 올라서 부조리극을 시연할 것이며, 이 극적 행위로부터 새로운 국가적 부패의 지평이 열리게 되리라는 점이다.

청춘 톡톡

분산에너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했으면

박 준 영
동신대 전기공학과 4년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인 나는 친구들과 취업과 미래에 관해 종종 대화를 나눈다. 대부분이 서울살이, 수도권살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콘텐츠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지방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그것도 2030세대 중심으로 말이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비단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니 정치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도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인구 소멸의 해결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그 방안을 나의 전공인 전기공학과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 생각해 보았다.

어떤 장소에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그 장소에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인력, 인프라 등은 물론이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도 포함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소비하는 전력량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다르게 전력을 소규모 발전소나 개인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다. 이는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분산에너지는 신재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자꾸만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생활여건 때문이 아닌가. 분산에너지와 함께 기업과 각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등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산에너지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분산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환경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를 주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면서 탄소배출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분산형 에너지가 대용량의 발전소를 대체해야 하는데 당장은 그럴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당장 분산형 에너지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만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면적의 신재생 발전 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만한 발전시설을 각 지방정부가 모두 떠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력 계통의 안정성도 더 연구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다.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와 민간의 협력,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분산에너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지방경제와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지방의 새로운 희망, 분산에너지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기 고

공예자원으로 '문화적 결혼'을 제안하다

천 혜 원
광주 미로센터 운영기획팀장

광주 동구 미로센터에 근무하는 필자는 2022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숲에서 진행된 시조카의 결혼식을 경험하고 예식 공간에 대한 상식적 틀로부터 자유로운 발상과 동시에 오로지 예식의 주체는 신랑 신부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결혼의 대안적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태생이 미국이라 한국말이 서툰 한국계 신랑과 미국 시민권자인 멕시코계 신부의 결혼식은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된 가운데 '결혼'에 대해 마음먹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예식의 장을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획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스토리가 담긴 시간과 공간으로 계획하여 하객이 아닌 결혼 구성원으로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버진로드'라는 루틴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울창한 숲속 오후 2시 햇살 아래 경건함과 엄숙함 속에 진행된 웨딩 세리모니를 시작으로 2부 페어링 파티와 3부 디너 파티가 끝나도록 결혼식에 초청된 100여 명의 하객은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식에 온전히 함께 했다. 특히 한국의 결혼문화에서도 사라져가는 '폐백' 의식을 약식이 아닌 전 과정을 모든 하객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함으로써 한국 전통 결혼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가는 첫날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 내었다.

동시대 같은 세대의 다른 결혼방식을 경험하고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본질적 가치의 회복과 대안적 결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예식 일정의 여유롭지 않은 시간과 과도하게 장식되고 다소 권위적인 예식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온전히 결혼식의 모든 과정에 하객이 아닌 결혼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가운데 문화적으로 결혼 방식이 변화되는 첫 시도로써 지역의 공간과 자원이 토대가 되는 '엣지 웨딩(edge wedding)'을 기획하였다.

'엣지 웨딩(edge wedding)'은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으로 과도화 된 데이터량을 중앙집중 서버가 아닌 분산된 소형 서버와 다른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탈권위적 서비스 방식인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개념을 차용하여 결혼 문화의 대안으로써 '상호 보완적 닮음'이라는 의미론적 결을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밋밋하지 않고 강렬한', '멋진'을 의미하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있다.

아울러 엣지 웨딩의 문화적 매개 자원으로 '공예'와 '결혼'의 결합을 통해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예식의 틀을 벗어나 지역 공예가들과 지역민들의 협업으로 '공예적 결혼'에 함께할 웨딩 오브제와 웨딩 레지스트리 등 문화적 결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지난해 9월 미로센터에서 '공예-인연을 만나다' 전시회를 선보였다. 지난 6월 1일(토)에는 공모를 통해 신랑·신부 한 쌍을 선정하여 공예적 결혼식을 진행했다.

예로부터 공예품은 일상생활에서 쓰임을 위한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오브제 자체로서 가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미로센터에서 진행한 '공예적 결혼 프로젝트'는 공예가들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한 '공예-결혼', '공예 한 상'과 '레지스트리(축하선물)' 등 다양한 공예적 제안이 관계 미학적 스토리로 오늘날의 결혼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결혼문화를 공예적 해석을 통해 제시한 전시와 예식의 현장이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가운데 여유와 정성이 듬뿍 담긴 '공예-결혼'의 실험적 관계 설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지역 공예자원와 지역 산업으로써 웨딩 자원이 '인연'을 맺고 결합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 창조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공예-결혼' 의 관계 미학적 스토리를 전시와 예식으로 제안한 '문화적 결혼 모델'을 통해 가치 중심적 소비를 지향하는 결혼 적령기 세대에게 관행적이고 과도한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 대신 새로운 대안적 결혼문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공공 공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탄력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생활문화가 다양하게 소비되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社 說

의료계 집단휴진 강행 환자 고통은 외면하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광주·전남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 30% 가량이 오늘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후 그동안 70~90명의 교수가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20~30명이 휴진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대병원 교수 30% 가량도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과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소재 개인 의원 11~14% 가량도 진료 중단에 동참한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8%)이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고, 전남은 966곳 중 137곳(14.18%)이 휴진 신고를 했다.

일단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교수, 개인의원의 참여가 적은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일 휴진 참여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일부 교수들의 휴진에다 광주·전남지역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도 동참해 환자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됐다.

이들 비대위는 "지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역의료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어떤 명분으로도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와 의료당국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공백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해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의협은 전면 휴진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가해자가 가족이라니…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노인 학대 가해자가 주로 가족이라는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32%인 7025건이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났는데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학대의 대부분은 거주하는 집에서 일어났고 가해자의 70%가 가족이었다.

광주시만 따로 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모두 470건으로 전년(398건)보다 18.1%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8.7%인 229건이었으며 1년전(167건)보다 37.1% 증가했다. 광주의 노인 학대가 심각한 것은 신고 건수 대비 실제 학대 비율이 높다는 것과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가파르다는 점이다. 더구나 광주의 경우 발생 장소의 89.1%(204건)가 가정이다보니 가해자의 85.6%(196건)가 가족이었다.

노인 학대가 늘어나는 것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노인 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가족이라는 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허술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다.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돌봄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는 현실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노인 학대는 가족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지만 고령의 부모 등 노인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들에게만 맡겨둬선 안된다. 광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24시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자랑하고 있다.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빈말에 그치지 않도록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과 함께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

無 等 鼓

'건익위원회'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아 비밀리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들의 잘못을 밝히고 민심을 살피던 관리를 말한다. 신문고는 대궐 밖에 달았던 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자 할 때 마지막 방법으로 이 북을 쳤다.

'암행어사'(청백이)와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다. 프랑스어(mascotte)가 어원으로 행운의 부적을 뜻하는데 오늘날 행사 및 단체를 상징하는 이미지 캐릭터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권익위는 상징 마스코트를 소개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국민 권익의 지킴이로,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권익위원회가 최근 '짐'이 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시민단체 신고 이후 116일 끌다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다. 검찰이 검사 3명을 투입해 수사중인데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대통령은 알았는지 등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참여연대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반부패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다. 특히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 재임 때 제안했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2016년 9월 28일)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으로 국회에서는 공개 선물 거부 선언이 줄을 이었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수업 중 캔커피를 주는 행동도 안된다며 조심하는 학교 분위기가 전해진 바 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착한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최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놓고 온라인 등에서 '권익위 아니라 건익위(김건희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아니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낯뜨겁게 다가온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